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전재성 · 박건영
(숙명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차 례〉

- | | |
|-------------------------|------------------------|
| I. 서론 | IV.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설명적 측면 |
| II. 국제관계이론의 기능과 가치편향성 | V. 결 론 |
| III.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규범적 측면 | |

· 주제어: 국제관계규범이론 국제관계설명이론 탈실증주의 가치편향성 인식론 존재론
규범론 실제적 주권성 탈근대성

【한글초록】

“국적 없는 국제관계이론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과학이론은 속성상 자연과학 이론과는 달리 설명의 대상을 파악하는 이론가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주관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실증주의 이론관이 풍미하며 잠잠했던 사회과학의 가치중립가능성에 관한 논쟁이 탈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지난 세기 후반부터 재현·확대되었다. 국제관계이론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관계이론이 과연 이론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지,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 이론이 가능한지, 국제관계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적인 국제관계이론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큰 물음 속에서, 국제관계이론의 구성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 국제관계규범이론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관계설명이론과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하여 실천의 길잡이가 되는 지식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이론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제관계의 장에서 한국이론가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고 논한다.

* 본 연구는 200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한국은 한국의 국제관계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격동하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할 때, 한국의 입장과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제관계이론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국제정치가 어차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구적 국제관계 속에서의 정치일진대, 각 개별국가 입장이 반영된 국제관계이론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한국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한국적 현실에서도 출현, 그러한 이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정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겸비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이론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간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완전지(完全知)를 가질 수 없으므로, 역사에 대한 지식과 유비(喻比)를 통해 현재에 대한 지식을 도모하거나, 혹은 단순화·추상화를 통해 체계적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당한 사상(捨象)과 재단(裁斷)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론의 유용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화 과정은 이론가에게 현실과 설명 사이의 공간에 자신의 주관(主觀)을 주입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가치관으로 윤색된 ‘일반화의 틀’을 산출한다. 언어에 앞선 실재를 언어로 개념화하고, 개념에 기초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가의 가치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현상을 이해·설명·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현실을 단순화하고 그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반화의 틀’ 즉 이론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이 이론가의 주관적 가치와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사를 포함한 모든 판단에 있어 이론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론가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이론은 속성상 자연과학이론과는 달리 설명의 대상을 파악하는 이론가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주관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실증주의 이론관이 풍미하며 잠잠했던 사회과학의 가치중립가능성에 관한 논쟁이 탈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지난 세기 후반부터 재현·확대되었다. 국제관계이론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관계이론이 과연 이론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지,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 이론이 가능한지, 국제관계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¹⁾ 1980년대 말부터 부상한 소위 탈실증주의 논쟁으로, “제3의 논쟁”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의 국제관계학자들에게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²⁾

1) Jim George, *Discourses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Co.: Lynne Rienner, 1994); David Campbell, *Recent Changes In Social Theory: Ques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Perspectives.*, ed. Richard A. Higgott (Canberra: 1988) 등 참조.

2) 제3의 논쟁에 관해서는 Yosef Lapid,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1989): 235-54 참조.

국제관계에 대한 학문적 파악이 대체로 강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생겨난 고민의 심화 내지 반영의 결과였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다투었던 아테네의 장군인 투키디데스의 고민의 소산이었던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로부터 춘추전국시대의 손자의 전쟁론, 한비자의 정치철학이 그러했고, 17세기까지 유럽의 패권을 다투었던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19세기에 승승장구했던 영국의 패권이 스러져가는 시기에 저술된 카아의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경영하게 된 미국이 유럽의 지해를 물려받아 서둘러 정립한 지난 세기의 국제관계이론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이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가들의 현실적 입장과 문제의식,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지식사회학을 주창할 갈 만하임은 “인간의 의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고의 소산”이라 하였는데,³⁾ 국제관계 이론가들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볼 때, 국제관계이론은 상당부분 자신이 속한 집단, 특히 국가의 가치관과 문제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제관계이론은 이론가의 국적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현재 국제관계학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은 그 대표주자들, 그들이 주시했던 국제관계의 현실들을 살펴볼 때 국적을 추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한계가 이론에 반영되어 그들 이론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나, 이론의 계보를 살펴보면 특정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호프만은 현대의 국제정치학이 “미국의 사회과학”이라 단언하였는데, 특히 국제관계이론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부분적으로 유럽의 학자들이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실증주의 이론관에 대한 탈실증주의자들의 비판이 지속되면서, 소위 주변화되었던 가치들에 기반한 국제관계이론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이론들은 미국적 세계관과 현상유지적 문제의식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탈근대이론, 비판이론, 페미니즘 이론,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구조주의 이론 등은 기존의 학문적 담론에서 배제된, 약소국, 주변부 국가, 3세계 국가, 비유럽 문명권, 여성, 노동의 입장에서 국제관계이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관계이론의 국적을 생각해 보는 지금, 한국이론가들이 생산해 낸 국제관계이론은 무엇인가, 혹은 현재 세계에서 주도적인 이론들을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토착과 수입의 이론들 속에서 장차 어떠한 이론들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후학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적어도 ‘이론의 권력’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3) Mannheim, Karl. 1936.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trans. Louis Wirth and Edward Shils. New York: Harvest Books.

4) Stanley Hoffmann,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no. 3 (1997): 41-60 참조. 현재 국제관계이론에서 미국의 여러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 이외의 학파로는 영국의 국제사회학과(English School) 정도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구미의 지배적인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으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 여러 형태의 탈근대이론을 지적할 수 있다. 현실주의의 경우 19세기까지 유럽의 국제정치현실을 반영한 고전적 현실주의와 2차 대전 이후의 신현실주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유주의의 경우 1970년대부터 복합적 상호의존을 선두로 신제도주의적 자유주의이론의 맥을 찾아볼 수 있다. 구성주의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제반 사회과학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시킨 이론이다. 이들 이론들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많은 국제관계이론들이 수입된 바 있고, 그 중 상당수의 이론은 “한국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문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미 국제관계의 현실이 급속도로 변한 이후여서 토착화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속이론이 하나의 사례였고, 최근 구성주의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이론을 둘러싼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이론들이 수입될 것이며, 이들의 토착화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한국적인 국제관계이론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큰 물음 속에서, 국제관계이론의 구성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 국제관계규범이론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관계설명이론과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제관계이론의 기능과 가치편향성

국제관계이론은 크게 두 가지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바탕으로 추상과 비교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설들을 발견해 내거나, 혹은 타 분야에서 공리의 위치에 오른 가설들에서 연역하여 국제정치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설들을 만들어내는 실증적/설명적 이론으로서의 효용이다. 현재 국제관계이론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민주적 평화론이 전자의 예라면, 합리적 선택이론을 이용한 형식이론이 후자의 예라 하겠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의 가설을 발견하여 이를 다른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이론관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국가나 지역,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국제관계의 가설과 이론이 발견될 수 있다면, 실로 세계는 명확히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관계이론은 규범이론의 측면에서 국제관계와 관계된 당위, 규범, 가치를 논한다. 앞으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들은 어떠한 입장에 기반하여 차별성을 드러내는가, 상반되거나 상이한 가치들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메타가치’는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색이다. 국제관계이론의 거대이론 혹은 일반이론이라 불릴 수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는 모두 세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본질에 기반하여 생존과 확장, 번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혹은 인권을 최대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구조주의는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나름의 규범적 기반과 설명이론이 함께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거대이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관계이론의 실증적 측면과 규범이론적 측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증주의가 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때에는 이론가의 가치는 이론가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가치중립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중시하였다. 소위 자연과학주의(naturalism)로서 어떠한 이론가가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론적 가설을 발견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이론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였다.⁵⁾ 그러나 실증주의적 사회이론 혹은 메타이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이론가의 가치중립,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 바, 국제관계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탈실증주의, 탈근대론의 형태를 띠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등 국제관계이론들은 이론가의 관심과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들 관심과 가치는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실제 모든 이론은 이론가의 사회적 환경과 관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론, 민주적 평화론, 국제제도론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실제로는 강대국의 세계지배에 봉사하는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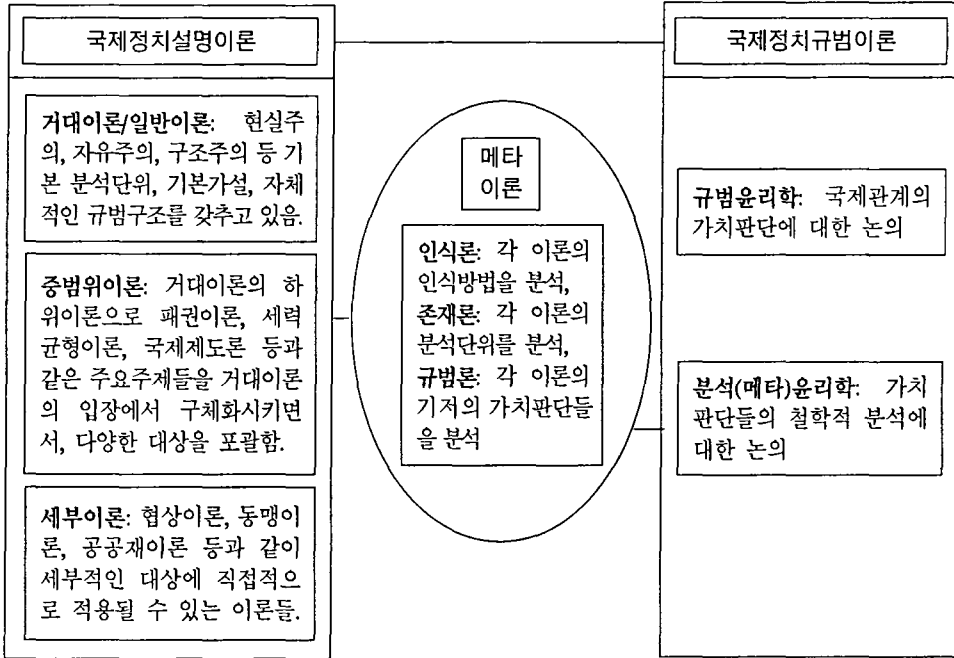
이론가들의 가치편향은 이론화작업 과정 자체에서는 발견해내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이는 모든 이론들이 보편적, 추상적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이론을 차용하여 주어진 현실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부정합성이 발견되어 이론의 정직성 또는 가치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이론에 내재해 있는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이론, 즉, 메타이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제관계의 거대이론들의 경우, 각 이론들이 주변화하거나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연구주제들이 있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현실주의의 경우, 국가간 협력이나, 국가이외의 행위자의 힘, 경제관계에서 가능한 수많은 협력사례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의 경우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힘의 격차, 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한 관계와 갈등을 주변화하고 있고, 구조주의의 경우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을 강조하느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가능성에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경제환원주의의 영향으로 정치적 요소를 경시하여 정치적 활동의 영역을 경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지속적이며, 각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모든 이론가들이 같은 정도로 자신의 가치와 관심을 이론에 투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이론가들은 보다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적용가능성이 보다 넓은 이론을 만들 것이고,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반성이 정도가 깊어 다른 국가, 사회, 문명권,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가치중립적인’ 이론을 만들기도 할 것이다. 반면 어떤 이론가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기의 현실만을 바탕으로 비교와 추상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론을 생산하기도 할 것이다. 결국 이론의 보편성은 이론가들의 안목과 가치의 보편성의 정도와 일정 정도의 비례관계를 가지며, 문제의 핵심은 이론간의 다름 뒤에 놓여있는 이론가들의 가치의 다름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국제관계이론의 실증적 측면 뒤에 규범적 측면이 놓여있고, 그 뒤에는 또 다시 이론가들의 가치관의 갈등이 놓여있으며, 실증이론들간의 갈등은 이론가들의 다양한 가치들간의 관계를 판정해 줄 메타가치이론, 혹은 메타윤리이론을 필요로

5) Anthony Giddens,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참조.

한다는 것이다.⁶⁾ 국제관계이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대이론, 혹은 패러다임간의 갈등은 상당부분 국제관계 메타규범이론이라 불리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이론의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국제관계이론의 구조⁷⁾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선 한국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실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실증적 설명이론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한국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제관계 전반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시해 줄 규범이론이 있는가 하는

6) 역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들간의 조정, 즉 메타윤리학적 입장에서의 역사철학의 조정문제를 다룬 대표적 학자는 E. H. Carr이다. 국제정치학자로서의 Carr의 메타윤리적 입장에 관해서는, 전제성(1999), "E. H. 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의 국제관계이론," 『한국정치학회보』 33-3, pp. 391-408 참조.

7) 현존하는 국제관계이론들은 설명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설명적, 혹은 규범적 측면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작은 이론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국제관계의 관점(perspectives)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협의의 이론(theory)이라 할 수 있겠다. 전자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등의 예가 있어, 이들 이론들은 설명의 기본 단위, 가설 등 설명적 측면의 요소들 뿐 아니라, 각자의 주요 규범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국제제도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이론으로 거대설명이론의 변모나 규범이론의 요소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이들은 분석적 관점에서 이론의 효용에 따른 분류에 맞추어 서술되고 있으나, 실제로 각 이론의 연구는 관점과 이론들을 각각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탈냉전기 한국은 급변하는 세계적 차원의 세력배분구조와 동북아의 지역구조, 그리고 남북관계 속에서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 제도화라는 다양한 국제정치의 변화의 동력 속에서 발전의 기회와 제한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한국의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유용한 국제관계이론이 존재하는가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관계이론을 외국의 학계가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는 한국 국제관계이론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관계이론 전반의 발전 수준이 미흡해서 그러한 면도 있다. 냉전적 양극체제의 연구에 몰두하던 수많은 이론가들이 소련의 몰락과 이에 따른 양극체제의 해체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은 실로 국제관계이론의 무력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의 전반적 저발전뿐 아니고,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제관계이론이 강대국의 관점에서 생산되어, 약소국 혹은 중진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들이 미처 이론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고, 또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산된 이론이라 할 지라도 국지성(局地性, locality)이 너무나 강하여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국제관계학자들이 현재의 한국의 외교상황으로 보아 구미의 경우보다는 현실주의의 기본 논의에 공감함을 표시하기는 하나, 왈츠의 미국식 현실주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같은 약소국 혹은 중진국에 속해 있으나 남미에 경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종속이론의 적실성에 또한 회의를 품게된 사실 등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 다자주의적 제도의 효력에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역시 주로 강대국간 협조관계를 중심으로 이론화를 시도하여, 국력의 차이가 명백한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강요된 협력의 경우의 이론화, 협력의 틀을 주관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주변화되는 약소국의 이익 등의 측면이 주변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구성주의의 경우, 자체적인 규범적 편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미국의 국제정치이론계에서 점차 협력과,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편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적 집합정체성의 측면을 점차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관계이론이 점점 더 많이 생산되고 정교화된다 해도, 그것이 한국의 국제관계 현실을 설명해주는 데 그 정도에 비례하여 도움을 줄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험적 현실에서 추상된 이론을 단순히 보편적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이를 한국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몰역사적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제관계 규범이론을 ‘구체적 실재로서의 한국’의 국제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지침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일정부분 변화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떠한 이론가의 관심이 한국적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그러한 가치와 관심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한국의 상황에 적용될 때 대단히 철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콕스가 신현실주의를 현상유지적 이론이라 비판하였는 바, 만약 한국이 분단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는 현상변경을 시도하고자 할 경우, 신현실주의를 차용하여 설명과 실천의 지표로 삼는다면 중대한 불이익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구조가 행위자의 활동영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구

조주의적 현실주의는 한국의 독자적인 현상변경능력에 대한 회의를 부추길 것이며, 대단히 소극적인 외교정책만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의 득실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형적 미국 이론인 신현실주의를 활용한다면, 즉 비판적 절차를 거쳐 이론을 수용한다면, 한국의 이익(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론은 복잡다단한 현상을 일관되게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가치들간의 우선 순위를 설득력 있는 메타우리이론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론 그 자체가 막강한 현실적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어진 현실을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가가 곧 정치적 행위이며, 따라서 가용한 이론의 선택은 엄청난 정치적 선택의 파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의 국제정치현실을 실증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한국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범이론이 현재 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과연 기존의 이론들간의 적당한 조합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새롭게 한국의 현실에 맞는 이론을 창조할 것인가? 우선은 기존의 이론들이 한국적 현실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지니는지 냉철히 판단해보고, 그 정합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후, 새로운 이론의 창조의 요건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과 결정, 창조와 계획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할진대, 그러한 기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Ⅲ.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규범적 측면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규범의 관계이기도 하다. 국가간 관계는 때로는 적나라한 힘의 배분구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규범에 기반한 명분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규범의 국제관계가 힘에 기반한 국제관계에 밀려 무력해질 때가 있다 해도, 규범에 근거한 국제관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간 초국경적, 물리적 교류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관념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적 토대가 단단해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의 각 지역은 그 지역에 고유한 국가들간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위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개념으로 각 지역적 국제사회는 그 속에 고유한 규범이 있었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이루어왔다. 영국의 국제사회학파가 강조하는 국제관계의 사회적·규범적 측면은 현실주의에 의해 경시되기 쉬운 문화적·이념적 측면의 이면으로, 예를 들어 유럽의 근대국제체제는 주권적 평등이라는 근본규범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무정부상태이지만 사회성을 공유한 역설적 상황이었다. 불(Bull)이 저술한 『무정부적 사회』의 규범이라 할 것이다.⁸⁾ 이와는 달리 전근대의 동북아는 사대사소(事大宇小)라는 유교의 상호적 규범에 근거한

8)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The Grot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Diplomatic Investigations*, eds. Herbert Butterfield and Martin Wight (London: Allen & Unwin, 1972).

국제관계규범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공, 책봉, 봉삭 등에 기초한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관계가 규정되었다.⁹⁾

현대의 국제관계는 하나의 지구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점차 규범 정치, 규범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권적 국제주의나 신자유주의 모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규범의 후보들이라 할 것이다. 여전히 대외적 주권의 독립성과 주권국가간 평등성이라는 근대적 규범이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대안적인 규범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지탱하는 정치세력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제관계이론계의 탈실증주의 논쟁과 맞물린, 이러한 실제적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관계의 사회적 성격의 부각은 국제관계규범이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고 있다.¹⁰⁾

국제관계이론가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수용한다. 국가생존, 권력확장, 정복, 지속가능한 평화, 협력, 협력이 제도화, 인도주의, 착취로부터의 해방, 실질적 평등, 자유, 근대국가의 완성, 환경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한 인간안보의 실현, 남녀 성차별의 극복 등은 국제관계에서 추구되는 가치들의 몇몇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 이론가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성격과 이론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차별적으로 선택되고,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이들 이론가들이 생산하는 설명이론들은 이러한 차별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실제의 특별한 측면만을 다루거나, 혹은 실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게 된다.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거대이론/일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모두가 자체적인 규범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코 가치중립적 이론들이라 보기 어렵다. 현실주의의 경우, 2차 대전 이전의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무도덕적(amoral, 비도덕적 immoral)과 구별되는) 성격에 기반하여 도덕적 회의주의를 표방하고, 인간들의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여 온건한 평화, 협력을 강조하는 규범구조를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유럽의 오랜 전통 속에서 각 국가들간의 치열한 권력정치가 생산한 지혜의 산물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반성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고전적 현실주의는 자제심, 신중함, 온건함 등의 실천지, 혹은 프루던스를 강조하는 규범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¹¹⁾ 고전적 현실주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9) 국제정치학의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외교사에 관해 축적된 연구성과는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사학계의 외교사 연구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연구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서울: 일조각, 1992); 김한규, 『고대중국적 세계 질서연구』(서울: 일조각, 1982);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서울: 일조각, 2002); 김한규, 『한중관계사 I, II』(서울, 마르케, 1999);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7);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포락과 천하관의 변화』(서울: 일지사, 1998); 高句麗研究會 편,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서울: 학연문화사, 1999); Fairbank, J.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0) Mervin Frost,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Frances V. Harbour,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Ethics: Moral Theory and Cases from American Foreign Polic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Terry Nardin and David R. Maple, *Traditions of Internation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1) 고전적 현실주의의 규범구조에 관해서는 전재성(1999),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미국의 패권경쟁을 위한 현상유지적 국제관계이론으로 변화한다. 왈츠(Waltz)는 국가주권의 개념에 기반한 단위의 동질성과, 단위간 세력의 차이에 기반한 세력배분구조의 제약적 효과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국제정치란 형식적 평등을 가진 국가들이 실제적인 세력의 불평등에 제약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약소국들은 형식적 평등, 혹은 근대적 주권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세력배분구조의 거대한 힘에 종속되어 강대국이 만들어내는 정태적 구조에 제약받는 수동적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패권질서의 규범적 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힘을 행사하여 현상유지적, 혹은 문제해결적 과제만을 해결하면 되는 지배적 입장에 오르게 된다.¹²⁾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은 시장과 민주주의, 다자주의제도에 의한 상호협력과 평화의 증진을 주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현상유지적 패권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채택되면서 변질된 바 있다. 자유주의 이론의 주창자인 아담 스미스와 임마누엘 칸트 등은 시민사회 속의 개인의 도덕성과 공공성에의 헌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소위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을 주장하여, 이에 기반한 평화와 협조를 논하는 복잡한 도덕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¹³⁾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은 미국의 현상유지적 패권의 규범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 의한 평화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경제적 세계화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고, 민주적 평화는 미국의 세력기반 공고화를 위한 개입정책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합리화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적 제도에 의한 평화는 미국의 권력과 이익을 매개로 한 다자적 접근, 혹은 일방주의적 접근에 본의를 상실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는 구조주의, 혹은 종속이론 등에서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간 혹은 국제적 계급간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주변화하고 있고, 민주적 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간 평화에 대한 궁극적 인과관계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체제, 국가간 국력편차 등의 여타 요소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한편, 실증적 연구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협력 역시, 약소국 입장에서의 강요된 협력, 제도적 규범 생산에 있어서의 권력관계 측면보다는 자발적 협력의 경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구미 국제정치학계에서 논하는 바, 신현실주의의 대 신자유주의의 논쟁이라는 것도 실은 미국적 문제의식 속에서 규범적으로 제한된 논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이 미국 중심의 현 국제정치구조의 현실을 반영하여 윤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국제정치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이론 전체의 역사를 반영할 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실주의의 국제관계이론: 메타이론적 검토와 실천지(prudence)의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pp. 57-79 참조.

- 12) 신현실주의의 문제해결적, 정태적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Robert Keohane ed. (1996),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에 실린, Richard K. Ashley의 "The Poverty of Neorealism,"과 Robert W. Cox의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참조.
- 13)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론은 실제로는 강고한 도덕철학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논의에 관해서 장 의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 아담 스미스의 도덕의 손," 『한국정치학회보』, 30-4, pp. 4057-4078 참조.

< 표 2 > 구미 국제관계이론의 메타이론적 기초

	현실주의		신 자유주의	구조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인식론	실증주의, 해석학	실증주의	실증주의	사적 유물론, 변증법
존재론	구조-개체의 상호작용	개체주의	개체주의	구조주의적 전체주의(holism)
규범론	비판이론적 성격	문제해결 이론적 성격	문제해결이론적 성격	비판이론적 성격

해방 이후 한국의 국제관계이론이 구미 국제관계이론의 압도적 영향 아래 놓여있고, 특히 이론적 분석에 있어 구미의 국제관계이론을 수용, 적용하기에도 급급했던 작금의 현실을 돌아다 볼 때,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세력들이 주창하는 규범들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규범들이 그려내는 미래의 세계들 속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냉전의 시작 이후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정태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규범에 안주하여 현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도를 도외시하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목표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주어진 문제 속에서만 움직인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한국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와 세계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즉, 한국에 특수한 가치와 세계에 보편적인 가치의 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소위 열린 민족주의라는 상반된 경향을 조합시킬 규범이론이 있는가?

국제관계이론의 규범적 측면을 한국적 입장에서 재고하는 한가지 방법은 시간적 범위를 넓혀,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국제정치에 대한 규범적 입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는 방법이다. 동북아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생존을 최고의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자국의 처지에 갇힌 최소한의 규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보편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에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동북아를 주체적으로 재편하려고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송과 거란과 공존하는 다원적 천하관을 가지고, 불교와 유교에 기반한 나뉠의 국제질서를 운용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국과의 관계를 사대자소의 원리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조공, 책봉 관계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용해 가기도 하였다.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는 성리학 적 大小關係가 타성화되고, 국내적 봉건지배질서의 합리화 경향으로 독자적 세계관이 약화되었으나, 곧 실학의 등장과 개항 이후 자체적인 근대화의 노력 속에서 증립화, 동맹, 均勢政策, 兩節體制의 시도 등, 전통적 규범과 萬國公法의 근대 규범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¹⁴⁾

14) 노태돈(1999), 『고구려사 연구』, (서울: 사계절); 노명호(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

한편, 현재의 한국은 여전히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이 귀기울여 들을 만한 보편적 규범을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서구의 설명이론을 수입하면서, 그 근처에 깔려 있는 서구 혹은 미국 중심적 가치관을 암암리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현실을 설명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특수하고도 보편적인 규범구조를 창출하지 못한 채, 비주체적인 입장에서 연구주제와 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평화공존,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획득, 경제적 번영의 지속, 동북아에서의 생존 등이 그것이다. 모두가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과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안보제도를 주창하기는 하나, 기존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세계는 안보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규범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론적 규범은 정치에서의 명분이 되어 실제적인 정치적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새롭게 형성되는 규범적 권력을 추수하는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인 목표를 아우르는 국제관계규범이론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거시적으로, 현재 세계는 근대국제체제의 가치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탈근대적 가치 사이의 이행기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로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여타 국가의 비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한국의 국제관계이념의 역사에 기반한 한국의 규범을 세계의 규범구조에 삽입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시점이다. 한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운동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편입되면서, 규범적으로는 비판적 자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조주의적 반세계화의 대안인지, 혹은 문명의 공존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대안인지, 그러한 대안의 한국사상에서의 근거가 있는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비서구 국가들은 현재 유력한 규범들, 예를 들어, 인권, 자유, 평등의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상이한 함의를 가지고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특수한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일례로 중국은 제국주의 세력을 통해 자유주의를 흡수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같이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편적인 세계정치의 규범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한국적 국제관계규범이론을 만드는 접근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확하고 폭넓은 국제관계설명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근대적 문법의 비증이 점차 적어지고 새로운 논

천자,” 『한국사연구』 105, pp3-40; 이정신(1996), “고려의 대외관계와 묘청의 난,” 『사총』 vol. 45, pp. 67-98; 정옥자(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김세민(2002), 『한국 근대사와 만국공법』(서울: 경인문화사); 김용구(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1866-1882』,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정용화(1998), “유길준의 '양절' 체제론 : 이중적 국제질서에서의 「邦國의 權利」,” 『국제정치논총』 37-4, pp. 297-318; 현광호(2002), 『대한제국의 대외정책』(서울: 신서원) 등 참조.

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대의 국제관계를 어떠한 이론이 선점하여 설명해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 신중세론, 문명권의 충돌,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20대 80의 세계, 인권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지구촌 등 탈근대에 대한 대단히 다양한, 거대이론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¹⁵⁾ 이러한 논의는 비단 탈근대 세계정치경제를 설명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규범을 생산해내고, 이에 따라 국가들 혹은 여타 정치집단들의 정책을 재단함으로써 실제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관계이론이 이러한 세계적, 보편적 변화를 예측하여 보편타당한 설명이론을 생산해 내고, 한국의 입장에서의 규범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특수한 국가이익과 보편적 공헌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의 생산과정이 일정 부분 각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한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면서 추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비단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를 논하는 단계에서도 보편적인 대안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법으로는 한국외교사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위의 방법이 타국과 타지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방법은 한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현재에 적용가능한 규범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상당부분 동북아 국제관계사의 일부분이었고, 때로는 국내사 역시 국제정치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통일, 고려의 성립, 송·원과의 관계, 조선의 성립, 임진왜란, 병자호란, 개항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는 국제정치의 파란만장한 변화를 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과거의 외교정책결정자 혹은 당시의 국제관계이론가들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에 적용가능한 보편적 교훈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조선 중기 광해군의 대금 기미책, 소현세자의 대청 화해정책, 효종의 북벌정책은 새로 등장한 중국의 패권에 대한 제각기 다른 정책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한반도의 소극적 생존전략과 적극적 동북아 전략을 읽을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의 내외적 제약을 찾을 수 있다.¹⁶⁾

-
- 15) 최근 9.11테러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보이슈의 재등장을 탈근대적 속성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망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폭력을 둘러싼 근대체제의 속성이 세급에 기반한 국가의 독점적 생산, 소유, 사용이라 할 때, 국가 이외의 집단이 폭력을 생산, 소유하게 되고, 사용주체가 초국적, 비국가적 집단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또한 초국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테러집단의 폭력사용 동기가 세계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산, 문명권 차원의 이념투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근대적 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6) 전통외교사에서 한반도의 왕조들이 행하여 왔던 외교정책 대안은 크게 갈등회피의 고립전략(hiding), 세력균형전략(balancing), 편승전략(bandwagoning), 다자주의 전략(multilateral approach)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의 왕조가 주변 민족들에 비해 현저히 세력이 약화되었을 경우는 고립전략과 편승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의미있는 동맹세력이 되거나 자주국방의 힘을 갖추었을 때에는 세력균형전략을 추진한 경향이 있다. 유교의 이념에 의해 禮의 관념에 의해 국제관계가 事大交隣으로 개념화되었을 때에는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을 공유한 다자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각 시대의 주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정치의 변수들을 함께 고찰하여 이론화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인조는 광해군의 등거리정책을 주된 공격거리로 삼았는데, 인조 등장 이후 대외정책의 기초가 과연 변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국내정치 논리에 외교정책의 이슈가 종속된 경우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

현재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생존, 자주, 긴장완화, 통일, 발전 등의 기본 가치와 역내 평화, 협력, 인간안보와 같은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나름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수립해가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주도권 강화를 통한 질서유지, 경제구조의 주도를 통한 발전, 현상유지를 통한 이익극대화, 탈근대적 도전예의 대처와 같은 규범에는 동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관계이론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가치관을 내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비롯된 이론들이라 할 때, 독자적이 가치판단을 담은 규범이론과 설명이론의 창출이 시급하다. 더구나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간에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한미동맹이라는 제도가 추구하는 안전이라는 가치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을 극대화하려는 자주라는 가치는 반미감정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의 내용과 우선 순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¹⁷⁾

IV.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설명적 측면

국제관계이론에 국적이 있다고 해서, 200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이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어차피 하나이고 같은 대상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200개의 나라가 제각기 인식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나라들이 인식하는 공통된 세계의 모습이 있어서 각 이론들은 공통점과 보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관계학자들 역시 세계에 대한 나름의 이론적 인식을 가지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이론가들과 상당부분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전 세계로 확산일로에 있던 유럽식 근대국제체제에 편입되었고, 근대국가라는 주체로서 재정립되었으며, 이후 국가가 가지는 보편적 문법에 따라 행동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관계이론이 말하는 바,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모습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적 국제관계설명이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앞 절에서 논한 한국의 입장에서 규범적, 가치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설명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2차 대전 후 미국의 패권 유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이론이라는 시간성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듯이, 한국의 국제관계이론 역시, 현재 한국의 문제를 이론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념, 가설, 이론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을 설명하는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구미의 이론들은 강대국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로 발전되어 있다. 세력균형론을 예로 들어보자면,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황이 현재에 주는 함의도 크다 하겠다. 광해군의 외교에 대해서는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서울: 역사비평사); 한명기(2000), 『광해군』(서울: 역사비평사) 참조.

17) 약소국이 비대칭동맹에서 당면해야 하는 가치상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Chaesung Chun(2000), *Theoretical Approaches to Alliance: Implications on the R.O.K.-U.S. Alli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7-2, pp. 71-88 참조.

위해 분할·지배(divide and rule)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상(compensation)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19세기 개항 이후의 한국, 혹은 2차 대전 이후의 한국은 분할되고 지배되는 입장, 그리고 강대국에 보상으로 제공되는 입장이어서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이론적 입장에 서게 된다. 외교사가 강대국간 관계의 역사, 혹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관리의 역사로 기록될진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역사에서 도출된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이론이란 보통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례에서 도출된 추상어의 집합으로서, 추상적, 이론적 언어로 번역된 현실은 다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본질적 비교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 비교가 공통점보다 상이점이 많은 사례들간에 적용될 경우, 적용의 적실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보통 한국의 사례에 적용되는 이론들은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주권국가라는 단위로 한국을 설명할 경우, 형식적 주권이 아닌 실질적 주권에서의 주권성의 정도를 경시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국제관계를 주권국가간 관계로 개념화할 때, 주권성의 상이한 정도를 무시한 형식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적 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념적 편차를 두면서 이론화작업을 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다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의 설명이론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론이 설명과 예측을 목표로 할진대, 정확한 설명에 기반하여 미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을 토대로 정책환경을 설정한 후, 정책을 시행하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관계학자들은 한국의 국제관계 현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누적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의 도움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의 힘을 빌어 양극체제니, 다극체제니, 패권체제니 하는 체제적 변수가 한국의 외교정책 혹은 한반도, 혹은 동북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예측하였으며, 세력균형이론 또는 동맹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및 주변국 외교정책을 조망하였고, 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장의 확산에 따른 동북아 안정가능성, 혹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동북아의 민주적 평화의 가능성을 논하였고, 구조주의의 예를 들자면 중심-주변부 관계에 빛대어 한미간 종속관계를 논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축적된 이론적 지식은 한국적 현실을 조망하는데 실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많은 새로운 실천적 대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국가 생존이 부각되기도 하고, 세계화로의 적절한 편입이 강조되기도 하고, 종속의 극복이 논하여 지기도 하였다. 다른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현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이다.

국제관계학에서의 실증적인 설명이론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단위, 기본 가설, 세부 가정 등을 가지고 같은 현실을 다르게 설명한다. 이들 이론은 서구의 기존 거대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처럼 모든 이론의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론인 경우도 있고, 보다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연구주제에만 집중한 세부이론들인 경우도 있다. 동맹이론, 협상이론 등은 여러 거대이론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논하는 보다 세부적인 이론이라 할 것이다.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국제정치에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이론의 경험적 토대인 서구의 외교사적 현실을 사상한 채, 한국적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기왕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가 17세기 이후, 보다 정확하게는 1648년 베스트팔리아조약을 상징적 기점으로 유럽에서 발전되어온 근대국제체제의 경험 위에서 있는 것이고, 유럽의 특수한 근대체제는 제국주의와 2차대전의 전후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가 하나의 문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바야흐로 보편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우선적으로는 1876년의 개항과 더불어,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948년에 근대국가로 승인됨에 따라 국가라는 행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1876년, 혹은 1948년을 서양의 1648년과 형식적으로 대비해 놓고, 이후의 역사에서의 국제관계에 구미의 국제정치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17세기부터 이미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영국이나 프랑스라는 국가와, 50여년의 근대국가 역사만을 가진 한국이라는 국가가 같은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가설이 타당한 것일까? 예를 들어 현실주의에서 국가를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라고 가정하여 국제정치학의 가설을 발전시킴에 있어 영국과 한국이 같은 국가로 평면적으로 이론적 가설들에 대입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각 국가들의 국제관계 현실 및 역사와, 그 국가들을 설명하는 이론간의 관계로 축약된다. 한국은 한국의 국제관계 현실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데, 1948년 이전까지의 역사를 사상한 채,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국제관계이론의 틀에 맞추어 국가라는 행위자로 가정되어 가설들에 대입될 수 있을 것인가? 서구 국제관계이론에서 등장하는 국가에 한국을 대입해도 이후의 가설들이 타당하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국제관계이론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남미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속이론 정도가 예외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이론들의 귀납적 대상이었던 현실은 상당부분 구미의 국제정치 현실이었고, 여타 지역은 구미의 타자로서 등장하여 연구의 주제와 문제의식에서 주변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국제관계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상황으로 일찍이 사이드(Said)가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이나,¹⁸⁾ 문명연구에서 논의되는 구미중심주의 등의 논의와도 관계가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관점에서 구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구미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국지적 성격이 비판, 보완되기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그 와중에서 각 거대이론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이론들이 한국의 현실에 맞는지 살펴보고 이를 검증하여 적용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제관계이론가들은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을 만들거나, 혹은 서구이론을 한국에 맞게 변형시키기 위해 한국의 국제관계의 실제 혹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 실재가 어느 정도의 역사와 범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된다. 한국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국제관계사 강의는 대체로 서구의 17세기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근대로 이어지고, 아시아의 국제관계사는 1840년 전후 청의 개항과 더불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속해 있는 국제체제의 근원이 유럽의 근대이며, 따라서 이 체제의 근원과 작동논리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일면 정당한 접근법이다. 또한 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상이한 국제사회 속에 있다가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근대유럽국가체제에 편

18) 정진웅, “오리엔탈리즘의 두얼굴: 세속적 오리엔탈리즘과 구도적 오리엔탈리즘,” 『동서비교문화저널』, 창간호: 233-251 참조.

입된다는 점에서 19세기 중반부터가 비로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중반 이전의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현실은 현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리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개항 이전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문명권에서의 국제관계였고, 이는 현재와 상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관계학자들은 거슬러 올라가 개항 당시까지 소급하여 한국의 국제관계 현실을 정의하고 이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을 성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국제관계사와 국제관계이론의 관계의 문제에서, 개항 이전 전통적 동북아시아가 근대적 국제관계에 편입되기 이전의 국제관계 현실은 현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의 경우 서구의 고대, 혹은 중세의 연구를 통해 이론적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양극체제와 냉전을 비교한 성과, 중세연구를 통해 주권의 개념 변화를 추적하여 탈근대를 신중세로 파악하는 성과 등), 한국의 경우 전근대의 연구는 그러한 성과를 가지기 어려운가? 전통국제관계사는 첫째,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왕조들이 추구해온 외교정책의 다양한 선택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생존전략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이에서 실제적 교훈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외교정책은 세력배분구조, 국제정치경제구조, 국제규범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지만, 전통외교사의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와 한반도의 외교정책간의 상응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통과 근대를 관통하는 외교정책상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사대자소, 혹은 조공책봉질서의 본질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에 대비되는 사례를 제공하여, 비교국제사회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사대자소질서는 형식적 위계질서 하의 실제적 무정부상태(anarchy under hierarchy)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중국이 상위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약소국이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 자율의 위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¹⁹⁾ 반면 현대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는 형식적 무정부상태 하에서의 실제적 위계질서(hierarchy under anarchy)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질서를 상대화하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전통국제관계사는 비교의 준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비교의 준거는 위에서 논한, 앞으로 다가올 탈근대의 질서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근대적 국제관계가 시작된 이래의 한국의 국제관계 역시, 구미의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 근대주권국가간 질서로 일반화하여 말하기 힘들다. 현대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의 근대적 주권성에 기반하여 형식적 평등성을 논하고, 다만 국력의 편차를 고려하여 구조적 특질을 변수로 고려하는데, 이는 각 지역의 근대국가형성과정의 역사성을 사상한 결과로 국제관계의 정확한 모습을 가리고 있다.²⁰⁾ 주권개념을 형식적, 법적

19) 구선희(1999)는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서울: 해안)에서 전통 조청관계에서 조선은 내정과 외교의 자율을 누려왔고, 1880년대 청의 조선 속방화는 오히려 근대 제국-식민지관계를 청이 새롭게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과 실제적, 경험적 주권으로 나누어 볼 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형식적 주권을 소유하지만 실제적 주권성(sovereign-ness)의 정도에서는 엄청난 편차를 가지기 때문이다.²¹⁾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한미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동등하고 평등한 형식적 주권을 가진 두 나라, 그러나 국력의 측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두 나라간 관계로 한미관계를 이론화하는 것과, 한국과 미국이 역사적으로 상호작용해 온 과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주권자체를 부여한 강대국과, 아직까지 실제적, 이념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간의 관계로 한미관계를 이론화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한국의 주권성은 미국이 운용해 온 세력배분구조 속에서 애초부터 조건지워진 것으로, 이익의 형성과정과 이익계산의 구조 자체가 미국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구성주의가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구성주의가 점차 미국적 환경 속에서 자유주의화됨에 따라 세력배분구조에 의한 정체성의 변화의 측면이 사상되는 현상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유럽 지역의 정치단위들이 근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논의, 혹은 주권 국가 개념에 대한 역사적 탐구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의 형식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거대이론의 하부이론으로 존재하는 패권이론, 동맹이론, 국제제도론, 세력균형론, 협상이론, 국제정치경제론, 민주평화론 등 무수한 이론들 역시, 기본 개념과 가설에 대한 역사적인 재구성 없이는 토착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관계이론을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이로부터 유의미한 개념, 가설,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노력은 여타 3세계국가들의 경험과의 공통점을 보다 폭넓게 발견하여, 점차 보편적 기반을 가진 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서구, 혹은 여타 지역의 이론에 대해 얼마만큼 비판적 안목을 가지면서, 이를 한국의 경험과 학문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의 발전과 제도화의 증가로 세계는 점차 통합되어가고 국제(inter-national)관계는 세계정치경제(global political economy)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단일체로 변화하게 되면서, 국제관계학은 세계라는 통합단위의 내부 정치경제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국제관계이론은 보편적인 세계정치경제이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의 영향력은 학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방법을 선점하여 세계에 대한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론이 곧 권력이 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는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처럼, 세계정치경제이론이 형성되는데 각 국가의 이론가들은 자국의 현실에 기반한 이론적 가설을 끼워넣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

20)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간의 상호보완의 필요성을 논한 책으로,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Cambridge: The MIT Press, 2001) 참조.

21) 크래스너는 주권이란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모든 근대국가는 주권국가로 법적 평등성을 지닌다”는 국제법적 언명과, 이에 기반한 이론적 가설이 실제로는 대단히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Stephen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라도 사후적으로 증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을 보편화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이며 정치적 결과이다. 한국의 국제관계의 설명이론 역시 한국적 현실에 기반하여 본 세계의 모습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인식 위에 세계정치이론의 일 부분이 되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결국 한국 외교사와 한국 국제관계이론과의 관계로, 특수성과 보편성을 담지한 이론의 발전이 한국적 국제관계설명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V. 결론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하여 실천의 길잡이가 되는 지식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이론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제관계의 장에서 한국이론가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후학들이 세계정치경제를 인식하는 중요한 길잡이이자, 더 나아가 정치적 담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관계이론가들의 역할은 심대하다고 하겠다.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론은 또한 설명을 위해 창조적으로 가설을 도출해 내는 창작행위이기도 하다. 이론가는 끊임없이 타 분야의 이론을 탐구하여 국제관계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아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가진 가치관의 보편타당성을 위해 이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끊임없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가가 도덕적으로 개방적이어야, 생산되는 이론 또한 보편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 곳곳의 국제관계학자들은 국제관계에 대한 구미중심의 관점과 이론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²²⁾ 다양한 문명권과 이에 기반한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에 기반한 설명적 이론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의 다양화는 기존의 지배담론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와중에서 구미와 은연중에 문제의식과 목적이 일치하여 다른 지역들이 중시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증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논점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다양한 특수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와 연결시킬 때 보다 유익한 시각이 제공될 것이다. 나아가 이론은 반드시 검증되고 토론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경험적 연구를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 한국인만을 위한 이론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편적 설명력과 설득력 있는 규범을 가진 열린 이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Robert W. Cox, *The New Realism: Perspectives on Multilateralism and World Order*.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1997)는 구미 이외의 지역에서 추구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관계의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n Korea: In Search of Alternatives

Chun, Chaesung(Sookmyung Women's University)

Park, Kun You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ve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said to have its own sociological underpinnings such as nationality, class, or gender. Critics of positivist meta-theory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value-neutrality of current IR theories. Korean IR scholarship was not an exception in its orientation in both explanatory and normative theorizing, having been heavily influenced by Western IR theoretical traditions. This article problematizes Korean IR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theory of knowledge. It argues that theory should be firmly based on its own historical experiences and impending policy concerns. By reviewing current, Korean IR theoretical scholarship and orientation, it suggests a future possible course for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IR theory.